



일상 속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민생규제 혁파와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

- ▷ 한덕수 국무총리,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
 -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「민생규제 혁신방안」과 겨울철 민생안정을 위한 「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·지원대책」, 「겨울철 재난안전 관리대책」을 논의
 - 소상공인, 중소기업 대표, 농업인, 전통시장 상인, 우편집배원, 복지 일선 지자체 공무원,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등 **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여,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방식**으로 진행
 - 한 총리, “모든 정부 부처는 지속적으로 민생현장으로 달려가 끊임없이 소통하고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을 것”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2일(수) 오전,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한 복합 문화공간에서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.

○ 이날 회의에서는 「민생규제 혁신방안」, 「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·지원대책」, 「겨울철 재난안전 관리대책」을 논의했다.

○ 민생현장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 외에 **소상공인·자영업자, 중소기업, 농업인, 전통시장 상인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과 일선 복지 현장 공무원 등이 참여*해** 안건에 대한 토의와 함께 **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방식**으로 진행되었다.

* ▲ 국민등 :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,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, 정경재 숙박업중앙회장, 송명의 외식산업협회 부회장, 최영철 해피초원목장 대표, 김인호 청량리청과물시장 상인회장, 장지선 서대문구청 주무관, 임익수 서대문우체국 집배팀장, 김혜인 팔달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

▲ 부 처 : 중기부 장관, 복지부 장관,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

▲ 총리실 : 국조실장, 총리비서실장, 국무 1·2차장

- 우선 「민생규제 혁신방안」과 관련하여, 소상공인연합회, 중소기업중앙회 대표 외에 외식·숙박업·농업 분야 종사자와 함께 민생현장에서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토의하였다.
 - 우선,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부회장은 “환경인증 규제 폐지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 밝히며, 앞으로도 중소기업 관점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정부에 건의하였다.
 - 이에,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혁파 사례 외에 다른 분야의 인증규제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.
 - 또한, 외식산업협회 송명의 부회장은 최근의 음식점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외식산업의 인건비 측면을 지적하고, 현재 외식업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채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,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외국인 채용 규제해소를 건의하였다.
 - 이에, 방기선 국조실장은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며, 다음 주 개최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다.
- 다음으로, 「복지위기가구 발굴·지원 대책」과 관련하여 일선 복지현장에서 위기가구 발굴·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노인돌봄 생활지원사, 우편집배원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올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을 논의하였다.
 - 먼저,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김혜인 생활지원사는 돌봄종사자 근무여건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밝히며,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지원사 증원과 활동비 지원을 건의하였다.
 -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'24년부터 생활지원사를 증원하고 관련 지원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 - 아울러, 우편 배달업무와 병행해서 취약가구 발굴과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임익수 우편집배원은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에 복지등기*를 배달했던 경험을 공유하며, 해당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전국적인 확대를 건의하였다.
 - * 집배원이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에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주거 환경을 관찰·면담하고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→ 지자체는 해당가구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

- 이에 복지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복지등기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, 더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.

□ 끝으로, 올 겨울 대설과 한파, 화재 등을 대비하기 위한 「겨울철 재난안전 관리대책」과 관련된 현장 의견도 청취하였다.

- 과거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김인호 청량리청과물시장 상인회장은 당시 경험과 재발방지 노력을 소개하며, 피해를 입은 상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.

- 이에 중기부 장관은 화재 피해복구를 위한 저리자금 대출, 특례보증,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고, 관계부처와 함께 ‘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’을 시행 중이라 밝히는 한편, 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화재예방 활동 동참을 요청하였다.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“각 부처와 관련단체는 개선된 정책이나 제도를 국민들께서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, 불합리한 규제 등 민생 현장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인 협업노력을 강화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※ <별첨> 안전별 주요 내용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책임자	팀 장	장용희 (044-200-2056)
		담당자	서기관	이영승 (044-200-2535)
담당 부서 <민생규제>	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이인용 (044-200-2396)
		담당자	서기관	정대현 (044-200-2397)
<공동>	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	책임자	담당관	박재현 (02-2100-1280)
		담당자	전문위원	최재훈 (02-2100-1281)
담당 부서 <복지유기구조>	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한레지나 (044-200-2290)
		담당자	사무관	최단비 (044-200-2291)
<공동>	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	담당자	과 장	김문식 (044-202-3020)
		담당자	사무관	이하늘 (044-202-3009)
담당 부서 <겨울철인산>	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이대섭 (044-200-2365)
		담당자	사무관	홍성애 (044-202-2342)
<공동>	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유지선 (044-205-4110)
		담당자	사무관	김기솔 (044-205-4111)

< 안건 1. 민생규제 혁신방안 >

- 세계적 경기침체와 대외안보 상황 등에 따른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. 또한, 기술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제도로 인해 서민의 불편·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.
-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,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67건의 민생규제 해소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였다.

1. 서민 불편·부담 규제 혁파 (50건)

- 우선,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서민 불편·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, 사회적 약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50건을 집중 혁파한다.

< 주요 개선사례 (12건) >

과제 내용(주요 개선사례)

- ①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 제고
- ② 입·출항시 특정해역(NLL 접경지역) 어선의 대면신고를 51년만에 비대면 신고로 전환하여 1,700여척 생계형 어민의 새벽 대면신고 등에 따른 애로 해소
- ③ 해외여행자의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하여 소비자 구매편의 증진
- ④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리성 제고 및 전입지역 활용을 허용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
- ⑤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사용을 허용하여 소비자 권리보호
- ⑥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용 소규모화장실 설치를 허용하여 영농인의 현장불편 해소
- ⑦ 외식업에 E-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여 음식점업 인력난 해소 지원
- ⑧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·처리시설 건폐율을 20%에서 40%로 완화하여 전국 2천여개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·처리시설 지원
- ⑨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농지 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을 확대하여 농업 현대화 지원 및 농가수입 확대
- ⑩ 19세 이상 중증장애 손자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를 허용하여 장애 손자녀 보호 강화
- ⑪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하여 지방공항 이용고객 편의 제고
- ⑫ 의료인의 현장 의료를 위한 포터블 엑스선 활용을 허용하여 의료취약계층 응급상황 대응

2. 중소기업·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방안 (117건)

- 또한,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있는 과제(small deal)를 빠르게 해결하여 현장 속 기업활력의 큰 변화(big deal)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방안 117건도 발굴하여 적극 개선한다.

< 주요 개선사례 (11건) >

과제 내용(주요 개선사례)

- ①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 시장진입 지원
- ② 외국인투자지역 국·공유지 임대계약에 있어, 갱신 횟수나 갱신 전·후 임대기간의 총합(누계)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해 투자촉진 및 입주기업 불편해소
- ③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300만원(초과)으로 낮춰 자금운용 편의 제고
- ④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선해 양봉업 민생애로 해소
- ⑤ 선량한 주의의무 이행시 숙박업주 과징금을 면제해 영업애로 해소
- ⑥ 불필요한 부담·불편을 야기하는 수증레저업의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 전면 폐지
- ⑦ 소프트웨어 조달사업 과업심의위원회 행정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조달불편 해소
- ⑧ 유사 인증이 있으며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하고, 환경표지 인증기업의 사용료 납부를 폐지해 현장체감도 제고 및 기술개발 촉진
- ⑨ 파이프와 달리 특정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이음관도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을 만들어 외국과 같이 원활한 신제품 시장출시 허용
- ⑩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 목욕장업에 한하여 제조업 등과 같이 전기용량설비 1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(대행)을 면제해 에너지효율 증대 및 경영난 지원
- ⑪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 등재시에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외국의 사용현황 자료를 필요시에만 제출토록 개선해 기술개발기업 행정부담 경감

< 안건 2.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·지원대책 >

1.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·지원

- 겨울철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인적 안전망으로 촘촘하게 발굴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.

-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겨울철 약 30만 명의 위기상황을 점검하며, 이번 겨울에는 추가로 확보한 위기정보*를 통해 생활요금 체납가구와 독거어르신·장애인 등 취약가구를 중점 점검한다.

* 수도·가스요금 체납 등 11월 신규 추가정보 활용

- 통·이장, 생활업종 종사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, 지역주민을 좋은이웃들 봉사자로 위촉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정부 지원 또는 기부물품 등 민간지원을 연계한다.
- 각종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사전에 안내해주는 복지멤버십을 대중이용 시설과 유튜브 등으로 적극 홍보한다.

2. 대상별 맞춤 지원

- 독거 어르신, 노숙인, 취약 아동 등 겨울철 취약계층을 촘촘히 살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.
 - 생활지원사(3.4만명)를 통한 방문 및 안부 확인과 응급안전안심장비 설치(총 30만 가구)를 통해 독거·취약 어르신의 안전을 살피고, 배회 어르신 인식표를 보급하여 실종치매노인 발생을 방지한다.
 - 노숙인·쪽방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동절기에 응급잠자리*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.
 - * 동절기는 연속 50일(최대 10일 이내 연장가능)의 기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
 - 겨울방학 및 설 연휴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해 지자체에서 아동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,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.

3. 한파 대비 난방·건강 지원

- 난방 지원으로 한파위험에 적극 대응하고, 겨울철 질환 예방을 통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지원한다.
 -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·영유아 등에게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.4만원 지원하고, 가스·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최대 59.2만원까지 요금을 감면한다.

- 등유·LPG 난방비를 사용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59.2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며,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각각 64.1만원, 54.6만원 지원한다.
- 또한, 전국 경로당 6만 8천개소에 난방비를 월 40만원 지원하고,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천개소에 난방비를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한다. 어린이집 2.9만개소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한다.
-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시행하며 전화나 방문을 통해 혈압, 혈당 등 겨울철 건강을 집중 모니터링한다.

4.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

- 고물가·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소득·근로·주거·금융 등 분야별로 두텁게 지원한다.
- 내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을 역대 최고 수준인 13.16% 인상하고, 생계·주거급여 기준을 완화*하며 교육급여를 최저교육비 100% 수준까지 평균 11.1% 인상한다.
 - * 생계급여 기준 : 기준 중위소득 30% → 32%, 주거급여 기준 : 기준 중위소득 47% → 48%
- 긴급복지 동절기 난방비용 지급('23.10~'24.3, 월 15만원)을 통해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며, 돌봄 필요 중장년 등 돌봄 취약계층에 긴급돌봄서비스와 일상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돌봄공백을 해소한다.
- 퇴거위기 등 가구 임시거처 지원(최대 6개월),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등을 통해 주거 위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.
- 저신용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('23.3~)하고,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한다.

5. 따뜻한 동행문화 조성

-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나눔문화를 조성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한다.
- ‘희망 2024 나눔 캠페인’(‘23.12~’24.1) 등 연말·연시 집중 모금(4,349억원 목표, 전년대비 +309억원)을 추진하고,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을 운영(‘24.1~2)한다.

< 안건 3.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대책 >

- 선제적 안전관리로 대설·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.
 - 자치단체에서는 긴급상황(예상) 시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, 부단체장 직보 및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.
 - 도로관리기관에서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제설 및 통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, 필요한 곳에 장비와 인력을 응원한다.
 - 터널 출입구 등 도로 결빙취약구간 위주로 재해우려지역 7,212개소를 지정하고 취약시간대(23시~07시) 고속도로 순찰을 강화(4→6회)한다.
 - 특히, 도로살얼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*를 확대하고 노면온도센서 장착 순찰차를 활용해 도로결빙을 감지한다.
 - * (‘22) 중부내륙선 24개소 → (‘23) 서해안선 31개소 → (‘24~’25) 경부선 등 414개소
 - 특히,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민자도로 등 관리주체가 상이한 도로경계 구간 제설, 소형제설장비를 활용한 이면도로·골목길 제설 사각지대를 중점 해소한다.
-
-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 추진으로 대형화재를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.
 - 전통시장, 물류창고 등 대형화재 위험 시설은 현장점검 및 자율점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율소방대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철시 前 안전점검 하는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.

-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요양병원, 쪽방촌, 다중이용시설, 노후 산업단지 등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한다.
 - 특히,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은 불시 대피훈련 및 관계자 피난구조설비 사용법 숙달훈련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.
- 아울러, 화재 발생 초기부터 신속·최고·최대수위 대응,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로 대형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.

□ 연말연시 해넘이·해돋이 등 인파 운집 안전사고를 예방한다.

- 성탄절, 해넘이·해돋이 등 연말연시 인파 운집 현장 안전관리 대책점검 및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인파사고 예방 등 중점관리하고 대규모 지역축제 등은 정부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.
- 기지국 접속정보를 활용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및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인파 운집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응한다.
- 지역축제 개최 전부터 계절적 특수성(산, 얼음, 기온 등)을 고려한 ‘겨울철 지역축제 중점관리사항’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한다.